

정세균 전 총리, '전북책임론' 우려 입장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시시비비 제대로 가려야”

잼버리 파행의 이유로 중앙정부·지방정부 이중적 시스템 꼽아 지역정치권 역할 강조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잼버리 파행의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전북책임론'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21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처음에 잼버리가 유치되었을 때 전북도민은 잼버리가 무엇인가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세계 청소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도 모인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기대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진행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제대로 잘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역대 우리 대한민국은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모든 국제 경기나 국제 행사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치루는 나라로 평평이 나왔었다"면서도 "이번에 (잼버리는) 그런 평판을 제대로 유지 못한 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전북민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분명하게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깊이 따지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 어디에 덤탕이 써주는 식의 진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말 공정하고 냉정하게 사실 그대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릴 필요가 있다. 책임질 부분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전북도 담당 책임질 부분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잼버리 파행의 이유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중적 시스템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 전 총리는 "우리가 지방이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잘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책임이 너무 분산되어 있으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조직위원회나 운영 시스템의 근본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지 않으나 그런 진단을 한다"고 설명했다.

잼버리 파행이 새만금 SOC문제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경계도 했다.

정 전 총리는 "새만금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30년 넘게 진행된 프로젝트"라며 "그 사이 여러 가지 중여곡절이 있고 과거 새만금 사업이 중단될 위기, 방조제를 완성시키지 못할 위기 상황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나도 과거 다시 되돌리기 위한 힘든 싸움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겨우 새만금이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산단을 비롯해 미래형 산업 단지로 발돋움 하게 되고 그것은 이제 전북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 와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크게 표했는데 이러한 노력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정 전 총리는 지역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함께 힘을 보태서 우리 새만금의 미래에 발전시키고 미래에 대한민국과 전북 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새만금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때"라고 했다.

/뉴스

“대한민국 처지, 감격스럽지 않아”

이낙연 전 총리, 대통령실 한미일 정상회의 평가 반박
“과연 논평처럼 감격스러운 처지 됐는가” 비판
내실있는 대북·대중국·대러시아 정책 확립 요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금 대한민국의 처지는 결코 감격스럽지 않다”며 “한·미·일 연대강화 못지않게 한반도 긴장 완화 정책을 가다듬어 내놓으라”고 밝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금 대한민국의 처지는 결코 감격스럽지 않다”며 “한·미·일 연대강화 못지않게 한반도 긴장 완화 정책을 가다듬어 내놓으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이 어느덧 돌아보니 우리가 세상의 맨 앞에 서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와 있다고 깨달았다”고 자평한 바 있는데 이 전 대표가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한미일 연대강화 못지않게 한반도 긴장완화 정책을 가다듬어 내놓으라”며 “이제라도 북한, 중국, 러시아 정책을 내실있게 확립하라. 한반도에 한미일 대북중립의 대치구도가 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처지는 결코 감격스럽지 않다. 대한민국이 세상의 맨 앞에 서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긴장의 맨 앞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뉴스

분야에서 강화해 북한, 중국, 러시아의 리스크에 대처하기로 했다”며 “군사분야에 대해서는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미일 공조강화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연한 것을 감격하기보다는, 그 뒷면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그 뒷면이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어떻게 할 것이며, 한반도 긴장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한, 대중국, 대러시아 정책이 확립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한·미·일 정상회의의 의미를 두고 “안보를

확보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늘 앞만 보고 달렸는데 어느덧 돌아보니 우리가 세상의 맨 앞에 서서 미국, 일본 같은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와 있다고 깨달았다”고 자평한 바 있는데 이 전 대표가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한미일 연대강화 못지않게 한반도 긴장완화 정책을 가다듬어 내놓으라”며 “이제라도 북한, 중국, 러시아 정책을 내실있게 확립하라. 한반도에 한미일 대북중립의 대치구도가 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처지는 결코 감격스럽지 않다. 대한민국이 세상의 맨 앞에 서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긴장의 맨 앞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뉴스

농어촌유학 육성 체계화·재정 지원 근거 마련

민주 윤준병 의원, 농어촌유학 육성·지원법 대표발의



민주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유학은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현재 전북·전남·경원·충남 등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규들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21일 지방소멸의 실질적인 대책 중 하나인 교육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촌유학의 육성·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농업·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는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1년부터 도시 학생이 농어촌학교에 전·입학하여 일정 기간 생활하면서 농어촌체험을 하는 유학형태인 농어촌유학을 실시하고 있다. 또, 서울·전북교육청 등에서도 2021년부터 조례와 협약 등을 통해 가족체험형·홈스테이형·유학센터형 농어촌유학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유학은 참여 교육

량이 점차 확대되면서 참여 학생 수는 누적 1,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도시 학생에게는 농어촌 생태 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몰린 농어촌에는 학생 수 증가 및 인구 유입 등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농어촌체험교육의 특화된 형태인 농어촌유학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의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보니, 농어촌유학의 안정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어촌유학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농어촌유학을

“도시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농어촌유학의 체계적 육성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유학은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현재 전북·전남·경원·충남 등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규들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재정적 근거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오늘 발의했다”며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도내 14개 시군 기초의회 원내대표협의회 관계자들이 21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잼버리 파행 책임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도내 14개 기초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

“잼버리 파행 책임 전북에 전가? 안될말”

“조직위·정부부처 잼버리 준비 미흡·대응능력이 원인... 국회 차원서 국정조사 해야”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전북의 14개 시·군 기초의회가 하나로 똘똘 뭉쳤다. 전북 14개 기초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1일 오전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원내대표단은 “전 세계 150여개국 4만 3000여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새만금을 찾는 잼버리 스카우트대회는 전북도민들의 기쁨을 넘어 대한민국 차원의 경사이고 자랑스러운 그 자체

였다”면서도 “전북도민들은 너와 내가 따로 없다는 마음으로 잼버리 성공을 위해 개최지역의 책임을 다하며 노력했지만 조직위와 정부부처의 잼버리 준비에 대한 미흡함과 대응능력의 부재, 폭염등의 열악한 환경으로 파행으로 끝나게 돼 실망감 또한 매우 큰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잼버리 파행은 오직 전북의 욕심과 전 정부의 무관심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공정상까지 의심받는 감사원 감사를 준비하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로 이어지고 있

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잼버리 파행에 어떤 준비가 소홀하고 미흡했는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적정했는지, 조직위와 정부 그리고 전북도의 운영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더이상 전북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 14개 기초의회 원내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정부 여당과 조직위의 책임과 국회차원에서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뉴스

“잼버리 감사, 새만금 사업감사로 변질 안돼”

전북도 공무원노조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감사가 잼버리 기

반시설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감사 이어져 새만금 사업 감사로 변질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남 탓 공방 하지 말고 잼버리 관련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응해 사실 여부를 가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지

속적으로 밝혀 왔다”면서 “다만 새만금 국제공항, 도로 건설 등 SOC 사업과 연결하려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함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감사원 감사 국회 조사 대상이 잼버리만이 아닌 전북도 주요 현안 예산까지 확대한다는 소식에 도청 공무원들은 물론 전북도민의 불안과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뉴스

“잼버리, 대국민 사기극? 여권 정치공세도 넘어”

전북에향본부·전주상의 등 도내 9개 단체들

“도민 자존심 짓밟는 행태 계속한다면 책임 물을 것”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정치권의 전북책임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새만금 SOC를 향한 정치공세를 멈추라 경고했다.

전북에향본부와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여성경제인협회, 전북에총, 전북변협, 전북법무사회회, 전북수출협의회, 한국유네스코 전북협회, 전북문인협회 등 9개 사회·경제·문화예술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힘은 새만금 SOC 정치공세를 즉각 멈추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잼버리 파행과 부실운영은 국격을 떨어뜨렸다”면서 “이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잘못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심히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이 주장한 허위사실은 ‘잼버리 대회는 대국민 사기극’, ‘SOC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빨대’, ‘잼버리를 위한 새만금공황 예타 면제’, ‘잼버리용 새만금 동서 남북도로 추진’ 등이다.

단체는 “정치공세에 의한 국민의 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의 무차별적 비난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과 새만금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너는 목과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치공세를 멈추지 않고 새만금 SOC 예산 따내기를 잼버리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서 도민 자존심의 짓밟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연대를 통해 책임을 물겠다”며 “국민의 가이드라인에 의한 표적감사 여부를 두는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뉴스



도의회 교육위, 교원인사제도 개편 현장의견 수렴 간담회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병지)가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7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교원인사제도 개편 현장 의견 수렴 간담회는 교육위원회 김승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용태(진안) 의원이 주관한 행사로, 각 지역에서 근무하는 현장 교사 10여명뿐만 아니라 김성수 의원(고창), 김정희 의원(부안), 염영선 의원(정읍), 윤정훈 의원(무주), 오은미 의원(순창) 등도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지난 6월 발표된 전북도교육청 교원인사관리기준과 관련해 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지역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거주 교사 우대정책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지방소멸과 학생인구감소 등 지역교육의 현실을 담아내는 인사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참석한 의원들 역시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거주 교사 우대정책 등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크게 공감했다. /뉴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l.com